

## 현실 안맞는 정책 불신 키운다

### 재래시장 생닭 금지 서민 생계 위협 겨울철 반팔 아파트 단속 '탁상행정' 생필품 52개 관리 '구시대적 발상'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고유가 지속, 물가양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국민 혼란과 정부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이 대통령의 눈치나 보여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실을 한발 앞서 파악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고민을 담은 실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지난 달 전남·북에서 발병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전국으로 확산된 AI 저지를 위한 첫 당정합의를 갖고 AI의 확산 주범으로 재래시장을 지목, 재래시장에서의 생 닭과 생 오리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으로 AI가 확산된데다 재래시장에서의 생 닭과 오리 유통을 감시·규제할 뚜렷한 방법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AI 확산 주범으로 재래시장을 지목, 오리 취급업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과학적인 기준 없이 백화점과 마트를 재래시장보다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판단을 신뢰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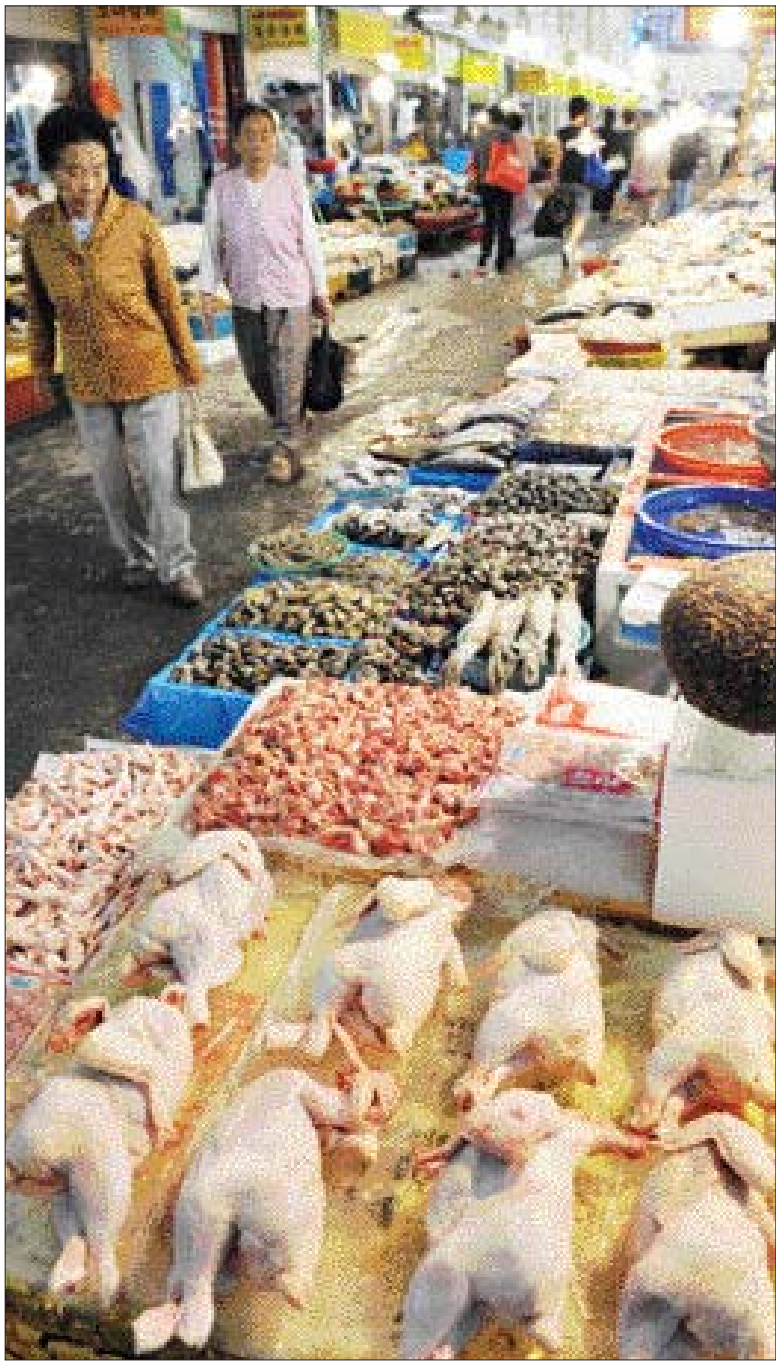
수 없다"며 "현장에서 건강한 가금류를 도축, 판매하는 재래시장의 유통시스템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지난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내놓은 에너지 대책도 유야 무야 됐다. 건물 실내 온도를 여름 섭씨 26도 이상, 겨울 섭씨 20도 이하로 의무화하고, 2011년부터는 과도하게 냉·난방 기기를 작동해 '한여름 긴소매 셔츠', '한겨울 반소매'로 지내는 일반 가정에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폐지했던 냉·난방 온도 규제책을 '제당'한 '탁상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아 법제화를 미루고 있다. 1천만 가구가 넘는 주택과 사무실, 점포에 대한 제한 온도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생필품 52개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원유·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등에 따른 글로벌 물가 압력을 매질 매질 단속과 같은 1970년대식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생김 단연한 결과였다.

오수열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뒤틀린 나옴의 설익은 대책으로 국민들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각 부처 책임자들이 대통령의 눈치나 보여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고민을 담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재래시장이 무슨 잘못? 정부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저지를 위해 재래시장에서의 생 닭과 생 오리의 판매를 전면 금지키로 해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내 가금류 판매 업소.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남부대학교**  
www.nac.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 정부, 먹을거리 안전 TF 구성

정부는 지난 10일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과 관련, 총리실 산하에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AI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부는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AI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국 60개 종합병원과 600개 소아과 병원 및 보건소 등을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전국민의 5%인 250만명 분의 치료용 항바이러스 제제를 확보해 예방 및 사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미 쇠고기 협상·공기업 민영화 등 비판 '2008 5월 광주선언' 준비

### 5·18 28주년 행사위 ... 내용·수위에 관심

'5·18민중항쟁 28주년 행사위원회'가 행사위 주관으로는 처음으로 '5월 광주선언'을 준비 중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5·18 기념행사는 보수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인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선언의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사위에 따르면 이번 5·18 행사기간 중 '2008 5월 광주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초안을 마련, 광주·전남 등 물론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 1천여개의 단체 및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행사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명이 각자 시안을 마련해 취합 정리한 이 초안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함께 '5월 광주'가 앞장서 풀어야 할 과제들

과 대결로 바뀌고 있다"며 이를 '역사

등 '이명박 정부'의 ▲시장 중심 및 실용주의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미 쇠고기 수입 협상 ▲대북 정책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질타가 담겨져 있다.

초안은 "5·18을 통해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도, 생명과 평화도 자본의 이익 앞에 부당되고 있다"며 "이윤과 실용만이 최고의 가치로 몰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인간성

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교육·물·전기·가스 등 공공분야의 시장화 음모는 민중 복지를 파괴하며 대운하 강행은 금수강산 곳곳을 파헤쳐 생태계와 환경재앙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안은 또 "한미FTA 강행과 공우병 쇠고기는 온 국민을 공포로 내몰고, 남북화해와 통일의 염원을 전쟁

의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초안은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다시 오일의 희망과 함성으로 온갖 불의한 세상을 뒤집고 대동 세상을 노래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공우병 소를 앞세우고 FTA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통일 조국을 염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온 국민과 세계 민방의 민중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마무리 하고 있다.

행사위 김옥현 사무처장은 "광주선언은 오는 18일 금남로에서 열리는 '5·18 민중항쟁 28주년 기념 정신계승 국민대회'때 발표될 예정"이라며 "과거 5·18 전야제나 국민대회 때 정치적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행사위 차원의 공식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행사위는 5월 선언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 등 주요 행사장에도 의견 모은 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 대형음식점 美쇠고기 한우 둔갑

## '뿔난 고객들' 손배소 추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유명 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음식점을 이용했던 고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문의하는가 하면 불매운동 등 소비자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현행법상 허위표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내려질 뿐 이 곳을 이용한 고객들의 피해보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모(45·광주)씨는 지난 8일 '광주시 상무지구 H 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는 언론보도(본보 8일자 8면)를 접하고 분노를 삭일 수 없었다.

지난달 말 가족들과 함께 이 식당에서 쇠고기 50만원어치를 먹은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박씨 가족이 주문한 쇠고기 양념 갈비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갈비살에 불어 판매했던 것이다.

이 식당은 지난달 20일부터 보름 동안 미국산 쇠고기 480kg을 팔았고, 20kg이 주방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속기반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적발됐다.

박씨는 '가짜 한우' 판매 시기와 음식점 이용 날짜까지 겹치자 속았다는 확신을 가졌고, 지난 9일 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불매운동을 고려 중이다. 손희정 광주 경실련 시민권익부장은 "H식당이 고급음식점으로 소문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만큼 혐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불매운동 여부를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이용고객들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김미희 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 부장은 "가짜 음식을 먹은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를 퇴출시키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한국유방건강재단**

내가슴을 핑크리본

## 2008 핑크리본 사랑마라톤대회

유방암에 대한 예방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랑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유방암 예방을 돕고,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 진단을 장려합니다.

주최: 한국유방건강재단  
주관: (주)아오레퍼시픽  
주최시: 2008년 6월 15일(일) 오후 8시30분  
(오후 9시30분 출발)  
출발소: 광주합동경기장

- 참가비: 무료 (복합복합비 포함)
- 참가비: 10000원(복합복합비 포함, 참가비 포함)
- 참가비: 20000원(복합복합비 포함, 참가비 포함)
- 참가비: 30000원(복합복합비 포함, 참가비 포함)
- 참가비: 40000원(복합복합비 포함, 참가비 포함)
- 참가비: 50000원(복합복합비 포함, 참가비 포함)
- 참가비: 60000원(복합복합비 포함, 참가비 포함)
- 참가비: 70000원(복합복합비 포함, 참가비 포함)
- 참가비: 80000원(복합복합비 포함, 참가비 포함)
- 참가비: 90000원(복합복합비 포함, 참가비 포함)
- 참가비: 100000원(복합복합비 포함, 참가비 포함)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한국유방건강재단, 광주광역시,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